

전북도 도민안전실 올 한해 주요 성과

재난관리, 한 발 빠르게

전북도는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한 발 빠른 선제적 재난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정부 평가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등 뜻깊은 2022년을 보냈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도는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철저한 사전 대비하고,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유사 시 조처하고, 보수·보강 등 재원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추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먼저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상황별 위

해 감염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원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올해 1월에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을 시작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 과제화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이행·점검, 개선 조치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반기별로 시행해 도관리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5월에 도 간부공무원 교육과 수립한 안전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으며, 7월 상반기 중대재해 안전계획 이행 및 점검 완료, 10월에는 전국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규

칙을 제정·공포하는 등 체계적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도 중대재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홍보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생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도 확대했다. 도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 154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 보듯이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부족하게 사실이다"며, "올해 성과와 반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및 신종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안전실 전 직원과 함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집중호우·태풍·이태원 참사 등 예방·대응 자연재난평가 우수 선정, 시기별 안전관리 만전

기상항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과 유사한 장소, 공간을 전수 조사해 다중집합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규모·복합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에 부족한 지원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도 신축 중이다. 센터는 연면적 1,000㎡ 규모로 18억 8,300만원을 투입해 6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의 통제부서로서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동해 신속한 수습·복구가 이뤄지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이태원 참사 때는 도내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 지원방안을 강구했고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체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물류비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매주 2회(수·금) 영상회의를 통

해 예방·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과 유사한 장소, 공간을 전수 조사해 다중집합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규모·복합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에 부족한 지원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도 신축 중이다. 센터는 연면적 1,000㎡ 규모로 18억 8,300만원을 투입해 6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의 통제부서로서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동해 신속한 수습·복구가 이뤄지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이태원 참사 때는 도내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 지원방안을 강구했고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체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물류비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매주 2회(수·금) 영상회의를 통

특히, 지난 8월 8일~17일 집중호우 발생시 김관영 도지사는 선제적 대비 및 사전 안전조치 철저 등을 특별 지시하고 익산 및 군산 호우 피해 지역의 현장점검도 나서 조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했다.

9월에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도내 전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표될 때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대본을 가동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밤을 새며 상황관리에 임하는 등 한발 앞서 재난상황을 관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기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확보한 성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1~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정부 기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의 재정 지원도 함께 확보함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등 시기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도는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서도 법정 시설물 및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했다.

도내 법정(시설물안전법) 시설물 3,700여 개소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민간전문가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진실 규명, 재발 방지” |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현장 조사 나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을 시작했다. 국조특위는 이태원 현장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을 방문해 참사 경위, 배경 등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국조특위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방문을 시작으로 오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조위원들은 헌화 애도하면서 유족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국조위원들에게 단장의 고통을 호소했고,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진실 규명이 여야 합의 하에 시작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당시 참상을 돌이켜 보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좁은 곳에서 15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프게 운명을 달리하셨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참사 현장 조사에선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과 조치 경과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군중 사이에선 "우리 아들 살려내라"는 등 오열, 절규하는 이들도 있었고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참사 현장 대응을 했던 이태원 피출소 방문 조사도 이뤄졌다. 피출소 앞에선 조사 동행이 좌절되자 낙담한 유족 추정 인물을 국조위원들이 위로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태원 피출소에서 국조위원들은 참사 당일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배경

관련 질의와 함께 대응 인력 배치 경위 등을 문의했다. 참사 전후 보고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피출소 방문 조사를 마치고 나온 국조위원들에게 유족 등은 "진실만 밝혀 달라",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왜 미안하던 말들을 안 하는 건지, 여당도 야당도 다 싫다"는 등 목소리를 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엔 서울경찰청, 서울시에 대한 방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오는 28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2차 현장 조사가 계획된 상태이다.

한편 이번 국조특위 조사는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조특위는 여당 불참 분위기에 야당 중심 활동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날(20일) 전격 정상화됐다. /뉴스

농협 경제사업 지원 농지비, 두배로 상향되나

2.5%에서 5%로... 민주 안호영 의원,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지원 마련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협 금융자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동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다.

농협중앙회는 2011년 신용주주와 경

제지주를 분리하면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자주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2.5%)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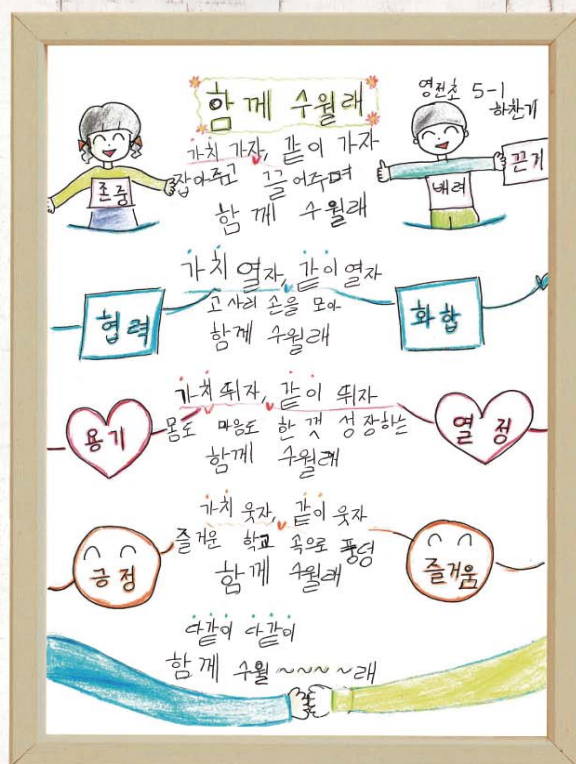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거의 변동이 없었고,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월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이 '함께'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이란 주제로 진행된 [2022 너도나도 공모전] 동시분야 대상 수상작입니다.